

**제 목 :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**  
**- 상호금융업권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. -**

## 〈 개정 주요 내용 〉

- ①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·건설업 여신 확대에 인한 조합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**업종별 여신한도 규제**를 도입하였습니다.
- ② 상호금융업권 조합이 유동성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**유동성 비율 규제**를 도입하였습니다.
- ③ 신탁 조합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중앙회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, **신탁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**을 현행 50%에서 **80%까지 상향**하였습니다.

## 1 추진배경

- '21.12.21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
\* 개정절차 : 입법예고('21.4.5.~5.17.), 법제처 심사('21.12.14.), 차관회의('21.12.16.)  
국무회의('20.12.21.)

- 이는 ‘20.12월 「상호금융정책협의회」에서 논의한 “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\*”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.

\*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도입(①업종별 여신한도 규제, ②유동성 비율 규제),  
신협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 비율 상향 등

## <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>

- **참석기관** : 금융위, 기재부, 행안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산림청, 금감원, 5개 상호금융 중앙회 담당 임원 등
- **목적**: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,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

## 2 개정 주요 내용

### ①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

- **(현행)** 최근 부동산업,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\*가 증가하고,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\*\*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

\* 부동산업·건설업 대출조원: ('16말 194 → '18말 529 → '19말 642 → '20말 791 → '21년6월말 856  
총 대출 중 부동산업·건설업 비중(%) : ('16말) 6.7 → ('19말) 17.6 → ('21년6월말) 19.9

\*\* 부동산·건설업 연체율(%): ('18말) 1.53 → ('19말) 2.68 → ('20말) 2.52 → ('21년6월말) 2.62

- **(개선)**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\* 규제 근거를 마련

\* **(감독규정 개정안)** 부동산업,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%,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%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

### ②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

- **(현행)**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,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타 금융업권\*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

\* 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 등 타 금융업권은 이미 유동성 비율 규제를 운영 중

- **(개선)**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\* 규제 근거를 마련

\* **(감독규정 개정안)**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% 이상 유지하되,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% 이상,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% 이상으로 완화

### ③ 신탁 조합의 신탁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상향

- **(현행)** 신탁 조합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% 중 절반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여 인출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나, 타 상호금융업권\*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

\* 농·수협·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% 예치

- **(개선)** 신탁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%에서 80%\*까지 상향

\* **저축은행**이 적금액의 10% 중 80%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

### 3 향후 일정

□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,

○ “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”은 ‘22년 12월 상환준비금을 ‘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하고,

○ “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”, “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”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\*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

\*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

□ 또한 「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\*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.

\* 「신용협동조합법」(§83조의3①)에 따라 시행령에 신설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에 규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